

이복현 “보험사, 외형 성장보다 시장·민생안정에 힘써야”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유동성 공급기관 역할 충실 이행
PF·해외투자 등 철저한 관리 주문
안전망으로서 보험 본연역할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보다 힘써 달라”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보험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장기자금을 제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8년에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증권 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사들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

려 등이 계속되며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등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12년 만에 규제 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부동산PF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보험 본연 역할의 예로 연금보험 개발, 이륜차 보험 활성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

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며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후와 헬스케어 상품 확대 등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관련 이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은행 대출금리 내리는데... “체감 어렵다”

신규 대출자 한정 낮은 금리 혜택
기존 소비자들은 적용 안돼 불안
차주들 곡소리에 추가 인하 예상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지만 신규대출자 한정으로 기존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자체 요청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금리 인하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4.21~7.08%로 지난 6일(연 5.08~8.11%)과 비교해 약 2주 만에 금리 상단이 1.03%포인트(p) 떨어졌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내려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코픽스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2년전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억6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 A씨는 당초 금리는 3.5%였지만 연 7%까지 오르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161만6561원에서 239만5089원으로 77만8528원 늘어났다.

직장인 A씨는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생활하기도 힘들다”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곡소리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예금금리 역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형 손해보험 5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내달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2.0~2.5%를 인하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들이 주행 중인 모습. /뉴시스

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불확실성 확대 따른 추가부실 대응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원조치로 은행의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손준비금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들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 능력 보안을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합산액이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추후 부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도 가능하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은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 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유리 기자 yu115@

은행권, 中소 이자감면 등 4000억 지원

은행연합회는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우리·하나·국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 차주는 약 28만 5000개사로 대출잔액은 50조원, 감면혜택은 4000억원 규모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차주의 이자부담 절감(감면혜택 3600억원) ▲연체 중인 중소기업 차주의 연체대출금리 경감(감면혜택 400억원) ▲정부기관과 은행 간 협업 확대·강

화(대상기업 600개사) ▲대출 회수 자체와 신규자금 공급 유지 등이 있다.

5대 은행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우대해(최대 1%포인트 인하) 대출을 실행한다. 고객에게 금리전환 옵션(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 신청 가능)을 부여해 금리변동에 따라 고정·변동 금리로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체 중인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1~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용 기자